

# 정치권에 불붙은 김종인발 기본소득...당청은 신중 모드

“도입 근본적 검토할 시기”  
심상정 대표 적극 호응  
의제 선점 당한 여권 촉각  
일각 “논의의 장 마련 기회”

한다”며 “나라가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부닥쳐 있어서 정당에 있는 사람 누구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잠룡들이 먼저 제기했지만 보수 야당 대표인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여권이 의제를 선점당한 형국이 됐다.

여권 안팎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체계를 물론이고 나라의 근간을 손봐야 하기에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다. 북유럽의 핀란드가 잠시 운용했을 뿐 아직 본격 도입한 국가가 없다.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4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로 전반적인 복지체제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며 “아직 당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구체화한 수준의 논의는 이르다”면서 “상당 기간 재원 등을 토론했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는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 복지를 축소하고, 기본소득으로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라며 “보수적 기본소득 논의를 경계한다”고 썼다. 이에 김 위원장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공세적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판관 만들어지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이슈라는 판단에서다. 역풍을 감안해 그간 조심스럽게 접근한 측면이 있는데 야당에서 논의를 시작한 만큼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입장에 반가웠다”며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지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썼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기본소득 문제로 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회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 연구 모임을 구성한 소병훈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법안을 만들어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근골을 때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호응하며 이슈화했으나 청와대 등 여권은 일단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열어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호응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이날 취임 인사차 정의당 대표실을 찾은 자리에서다. 심 대표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환영”이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다. “과거 통합당의 레퍼토리는 북한 탓과 대통령 탓뿐이었다”면서 “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당이 표를 극대화하는 경쟁을 하면서 많은 계층을 포용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담화를 낸 4일,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 정부, 대북전단 금지법 착수...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가능성

통일부 “접경지역 긴장 해소”  
국회 입법 과정 진통 불가피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개성공단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고 있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전단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전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여상이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평가가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진보·보수 간에 입장 차이가 뚜렷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 제정이 완료되지는 못했다. 2008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박주선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도 넘어가지 못했다.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조, 법률 전문가와 접경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그전까지는 경찰을 동원해 최대한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과기부장관 만난 김영록 지사 “방사광가속기 전남에 추가 구축해달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건의했다. 또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전남판 뉴딜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 반영과 함께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최 장관과 면담에서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시설로 10년 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충북 오창의 중형 가속기와 함께 나주에도 대형 가속기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대형연구시설의 위험 분산 측면에서 나주 혁신도시가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관으로 심의가 진행 중인 전남판 뉴딜 사업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판 뉴딜 사업은 ▲머신러닝 활용 특수교량 케이블 로보틱 NDE 유지관리 기

술개발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초연결성 기반 지능형 맞춤형 이동체계 구축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정성, 운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 제조 기술개발 ▲그린 수소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등 9개 사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